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람과 해를 닮은 정치

양이원영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 E: yangyi.assembly@gmail.com | T: 02-784-8834 | F: 02-6788-6740

서영준 비서관 010-6427-9787

양이원영 의원,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운영실태 지적

- 24년까지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저준위 폐기물만 35% 처리 예정
- 저준위 이하 폐기물 처리장에 비해 사업비 대비 처리비용 7.4배 높아 세금낭비 지적
-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변경허가 심사만 진행중,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오늘(1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주에서 운영 중인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 운영문제를 지적했다.

국내에서 중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2014년 준공되어 운영 중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운영될 저준위 폐기물장의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209만 원 선인데 비해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사업비 대비 1드럼 평균 처리비용은 1,543만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1단계 동굴처리시설)에서는 저준위 이하 폐기물만 반입되어 이미 전체 수용량의 25% 수준인 25,577.6드럼이 처리되었으며 저준위 이하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2단계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시점인 2025년 이전까지 35%가량이 처리될 예정이다. (34,929드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

까지 1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를 검토심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중준위 폐기물처리장에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태는 비싼 금고안에 휴지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며 “8배 가까이 차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서둘러 관련 사항을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구 분	1단계 동굴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
진행상황	운영(처분) 중	건설(공사) 중	설계 중
추진현황	’14년 준공, ’15년 운영	본공사 착수(’22.7.)	기본설계 중
시설규모	10만 드럼(200L기준)	12.5만 드럼(200L기준)	16만 드럼(200L기준)
처분방식	동굴형	표층형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위 치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좌 동	좌 동
준 위	중준위 이하	저준위 이하	극저준위
사업기간	’06년~’14년	’12년~’24년	’19년~’26년
총사업비	1조 5,436억원	2,621억원	1,573억원
공사금액대비 1드럼 평균 비용	15,436,000	2,096,800	983,125

○ (2022.09.19. 기준)

구분		수량(200리터 드럼 기준)
종류*	저준위	16,032.4 드럼
	극저준위	9,545.2 드럼
합계		25,577.6 드럼

*잡고체(철재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고무류, 비닐류 등)

(단위 : 200L 드럼)

연 도	~2021(누적)	2022	2023	2024	누계
처분량	24,378	**2,704**	3,120	4,727	34,929

□ 법령 개정에 따른 중저준위 폐기물 구분 변경과 운영변경허가

○ 2014. 9. :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원안위)

*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중저준위 → 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 및 처분 방식 규정 신설(동굴/표층/매립형)

○ 2015. 3.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개정(원안위)

* 일률적인 처분농도제한치 삭제, 운영자가 처분시설에 적합한 처분농도제한치 설정토록 규정 개정

○ 2015. 5. : 인도규정 개정 관련 1단계 동굴처분시설 변경허가 신청(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안전위원회)

○ 2016. 6. : 인도규정 개정 관련 변경허가 건 보완 요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17. 9. : 1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서류 보완* 후 신청(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안전위원회)

* 처분농도제한치 도출 등

○ 2017. 9.~ : 1단계 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검토·심사 중(원자력안전위원회)